보험중개사(공통) - 보험관계법령 등 - 1쪽

- 1.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① 책임보험
 - ② 간병보험
 - ③ 기술보험
 - ④ 날씨보험
- 2.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원수는 몇 명 이상인가?
 - ① 10명
 - ② 50명
 - ③ 100명
 - ④ 150명
- 3.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①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
 - ②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 - ③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
 - ④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45조에 따른 사항
- 4.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일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 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·선임계리사·보험계리업자 ·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, 보험 가입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5.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회사의 정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·교환·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유지·해지·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.
- 6.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"보험업"이라 함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(引受),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·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.
 - ② "상호회사"라 함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.
 - ③ "외국보험회사"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 - ④ "보험대리점"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(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 한다)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.
- 7.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될 수 없으며,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·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·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.
 -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.
 - ③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 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.

보험중개사(공통) - 보험관계법령 등 - 2쪽

- 8. 보험업법상 보험협회가 정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?
 - ① 보험약관에 대한 통제
 - ② 순보험요율의 산출·검증 및 제공
 - ③ 보험에 대한 조사 · 연구
 - ④ 보험상품의 비교·공시 업무
- 9.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 - ②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
 - ③ 보험금액의 지급 결정
 - ④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
- 10.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보험계약이전의 공고를 한 후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지나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게 귀속한다.
 -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.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.
 - ④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.
- 11.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이유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그 자체가 법규범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.
 - ②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제정하였기 때문이다.
 - ③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.
 - ④ 불명확한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.

- 12.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다.
 - ②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보험계약자는 청약 이후 그 성립 이전에 발생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.
 -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.
 - ④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자발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.
- 13.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보험증권은 상법 제666조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 - ② 보험증권의 훼손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.
 - ③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질 수 있을 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다.
 - ④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.
- 14. 보험계약의 성립 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낙부통지의무는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있으면 보험자가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.
 - ② 승낙의제제도는 보험자가 낙부의 통지를 해태할 경우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.
 - ③ 초회보험료의 지급과 함께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였으나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,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한다.
 - ④ 인보험 중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승낙전 사고담보제도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없다.

15.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계약자는 제1차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.
- ②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른 가입자격제한을 두고 있으며,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.
- ③ 보험의(保險醫)에게는 위험정보에 관한 고지수령권한이 인정된다.
- ④ 2014년 상법 개정으로 보험중개사도 보험료수령권, 계약체결대리권, 고지수령권을 가지게 되었다.

16.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기된 경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- ②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험자 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7.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보험료 지급 지체나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부활을 청구 할 수 있다.
- ② 보험자가 부활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③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요물계약이다.
- ④ 표준약관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 자살면책기간은 부활청약일부터 다시 기산하지 아니하고 해지전 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기산한다.

18.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.
- ②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, 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
-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.
- ④ 상법이 정한 법정면책사유를 보험약관에 규정한 경우에 그 면책사유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.

19.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이다.
- ②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. 다만,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사기로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고,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.

20.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상법에 따르면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그 타인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

보험중개사(공통) - 보험관계법령 등 - 4쪽

21.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③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.
- ④ 해상운송물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적하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
22.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단순초과보험의 보험료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.
-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전체가 무효이며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진다.
- ④ 사기초과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.

23.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중복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②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, 이를 위반한 경우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으로 추정된다.
- ③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.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중복보험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24. 보험자대위 중 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청구권 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.
- ② 인보험 중에서도 실손해보상적 성격을 지닌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 특약으로 청구권대위가 허용될 수 있다.
- ③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.
- ④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,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. 다만,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5.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- ②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나, 양수인은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- ③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④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
26.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손해방지비용은 단지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임에 반하여 방어비용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으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급여이다.
- ② 손해방지비용은 필요 또는 유익한 것이 인정될 때에 지급되지만 방어비용은 필요 또는 유익한 것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.
- ③ 손해방지비용은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방어비용은 일단 피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한 후에 보험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.
- ④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방어비용은 방어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때에만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.

보험중개사(공통) - 보험관계법령 등 - 5쪽

- 27. 상법상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?
 - ①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
 -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의 손해액 산입
 - ③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
 - ④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
- 28.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 -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 -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,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 - ④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면, 비록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손해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- 29. 다음 중 유효하게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
 - ② 보험계약자가 13세인 자녀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
 - ③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심신상실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
 -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이 동의의 뜻으로 보험계약 체결 직후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한 경우

- 30. 보험수익자 지정·변경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.
 - ② 보험수익자변경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.
 -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변경 후 이를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 - ④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.
- 31. 소화기 설치, 자동차 에어백 장착 등은 다음 중 어느 위험관리기법에 해당하는가?
 - ① 손실예방(loss prevention)
 - ② 손실감소(loss reduction)
 - ③ 위험회피(risk avoidance)
 - ④ 위험전가(risk transfer)
- 32. 다음 중 위법행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위험은?
 - ① 재산손실위험
 - ② 간접손실위험
 - ③ 배상책임위험
 - ④ 인적손실위험
- 33. 다음 위험관리기법 중 위험통제기법이 아닌 것은?
 - ① 위험회피(risk avoidance)
 - ② 위험보유(risk retention)
 - ③ 손실예방(loss prevention)
 - ④ 복제(duplication)

보험중개사(공통) - 보험관계법령 등 - 6쪽

- **34.** 다음 중 보험사기(insurance fraud)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?
 - ① 물리적 위태(physical hazard)
 - ② 법률적 위태(legal hazard)
 - ③ 정신적 위태(morale hazard)
 - ④ 도덕적 위태(moral hazard)
- 35. 다음 중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을 구분한 것은?
 - ①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
 - ② 근본위험과 특정위험
 - ③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
 - ④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
- 36. 다음 중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- ① 연금저축 자체로만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.
 - ②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보험회사만 판매할 수 있다.
 - ③ 연금보험료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.
 - ④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한다.
- 37.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?

이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자 구제제도 중하나로, 신용카드나 대출금 등을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대해 채무 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.

- ① 신속채무조정
- ② 사전채무조정
- ③ 개인워크아웃
- ④ 개인회생

- 38.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
 - ② 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대 30만 원
 - ③ 벽지근무수당 10만 원
 - ④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10만 원
- 39. 다음 중 상속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배우자에게만 상속된다.
 - ② 사망자(피상속인)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한다.
 - ③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.
 - ④ 상속세의 명목최고세율은 50%이다.
- 40. 다음 중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.
 - ② 생명공제계약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.
 - ③ 보험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이 된다.
 - ④ 월 납입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(일시납 1억 원이하)이어야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.